



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

KOREAN POWER PLANT INDUSTRY UNION (KPIU)

우 135-502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99-6 대동빌딩 5층 <http://baljeon.nodong.net> FAX 021-8159
조직쟁의실장 정현수 ☎ 02-3456-8158(사선 021-8158) mcgiber@empal.com

문서번호 발전노조 0811- 242호 2008.11.03.

수 신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산하 본(지)부 위원장

참 조 조직국(부)장/ 사무국장, 사무장

제 목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투쟁명령 1호 하달에 따른 세부지침

1. 노조탄압 분쇄! 임·단투 승리! 구조조정 분쇄! 해고자 원직복직 쟁취! 투쟁에 여념이 없으신 동지들께 뜨거운 동지애를 전합니다.

2. 제30차 중앙위원회 결의에 따른 쟁대위 전환 및 투쟁명령 1호 하달에 따른 세부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이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,

3. 특히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투쟁명령은 조합원이 잘 보일 수 있는 모든 공간에 게시하시기 바랍니다.

붙 임(별도발송-이메일)

1.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투쟁명령 1호. 1부.
2.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투쟁명령1호에 따른 세부지침 1부. 끝.

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중앙쟁의대책위원장 박 노 훈



' 08년 7대 요구 쟁취 투쟁! 승리!

【중앙쟁의대책위원회 투쟁명령 제1호】

중앙쟁의대책위원회 **투쟁명령 제1호**를 다음과 같이 하달합니다.

1. 전지부는 집행위원회를 소집하여 **11월~12월 총력투쟁**을 결의한다.
2. 전조합원은 **11월05일 중식집회**에 참석한다.
3. 통상근무 조합원은 **11월09일 전국노동자대회**에 참석한다.
[장소 추후공지, 시간 13시]

※세부지침은 공문참조(발전노조 0811- 242호)

2008. 11. 03

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중앙쟁의대책위원장 박 노 군



※중앙쟁의대책위원회 투쟁명령은 조합원이 잘 보일 수 있는 모든 공간에 게시하기 바랍니다.

붙임 - 2

중앙쟁의대책위원회 투쟁명령 1호 하달에 따른 세부지침

1. 주요정세(11월~12월)

1) 일반적 상황

o 가중되는 세계 금융위기 상황

- 2008.10.6~10 '역사적 한 주' 동안 전 세계 증시는 4조\$가 증발했고, 올해 2008년 들어 25조\$가 증발
- 미국 증시는 이 한 주 동안 18.2%가 하락(1896년 뉴욕 증시 개장 이후 최대)
- 계속되는 금리 인하, 구제금융 조치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의 불안 여전
- 도쿄증시 역시 24% 하락

o 한국경제의 위기 징후

- 9월 한달 동안 증시에서 137조원이 증발(올해 정부예산 250조원의 55% 수준)했고, 10월16일 하루 코스피 9.44% 폭락하며 64조원 증발
- 기관투자의 핵심인 국민연금 손실 8조원 이상
- 환율은 9~10월간 400원 이상 인상(10.22. 1,500원선 돌파) : 달러화 강세보다 더 심각한 엔화 강세(1년간 원화 대비 60% 이상 인상)
- 2008년 무역수지 누적적자 120억\$ 예상
- 2009년 경제성장을 3% 수준대 진단

o 2MB정권의 반동화

- 재벌 및 해외자본 위한 공기업 선진화
- 언론 장악
- 종부세 등 부자위한 감세 정책
- 비정규법 개악 추진

2) 공공부문 상황

(1) 공기업 선진화방안 실행 및 경영효율화 공세

① 공기업 선진화 방안 개괄

o 우회적 민영화 수준의 후퇴된 공기업 선진화

- 1~3차 걸친 공기업 선진화방안은 △일부 공기업(국내 공항, 주택보증, 산업은행 및 공적자금 기업,

공기업 자회사 등)의 매각 △ 우회적 민영화(가스, 인천공항, 지역난방, 전력기술, 철도, 방송광고, '국민연금' 등) △ 주요 공공부문의 통합(토공-주공, 기초과학기술 지원, 정보통신 기술 지원, 노동, 환경 등) 등의 조치를 발표하여, 2MB정부의 '민영화' 중심의 공기업 구조개편이 여전하게 기조로 작용하고 있으나, 전반적으로 촛불정국 이전의 흐름에 비해 후퇴된 수준.

○ 공기업 선진화 후퇴 배경

- 이러한 배경에는, △ 촛불집회 정국에서의 주요 국가기간산업의 매각에 대한 '자신감' 후퇴 △ 치밀한 준비없이 98년 수준 강행에 대한 정부부처간, 당정간 이견 △ 국내외 경기 후퇴로 인한 공기업 매각의 부정적 전망 △ 2MB 측근의 '자리 마련'을 위한 정치적 포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
- 문제는, 이러한 공기업 선진화 구상은 곧바로 강도 높은 '경영효율화 공세'로 전환될 흐름으로 구체화됨.

○ 최근의 경기 위축 관련 선진화 방안 시행 전망

- 최근 산업은행 민영화에 대한 부정적 진단, 공적자금 투입 기업의 매각과 관련한 시장의 불안(대우조선 인수 예상 기업의 주가 폭락 등)으로 인해 공기업의 경영권 매각 전망은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.
- 다만, 환율 폭등에 따른 외화 유치를 위해 지분 매각이 예정된 공기업(인천공항, 지역난방 등)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해외지분 유치 정책이 구체화될 수 있음.

○ 정부출연연구기관 구조개편 방안

- 공기업 선진화방안에서 제외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해서는 '한반도선진화재단'의 기획에 따라 현재의 23개 경제인문사회 연구기관의 통폐합을 2008년말까지 추진할 것으로 예상

② 강도 높은 경영효율화 공세

○ 공기업 선진화방안에 포함된 '경영효율화 방안'

- 전체 공공기관(1~3차 선진화 대상 포함)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8.26 '공공기관 선진화 방향'에 대한 방침을 통해 각 공공기관의 10% 감축의 전제하에 '경영효율화 방안' 제출 요구
- 9월10일까지 전 공공기관이 1차 제출 완료.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자율적인 예산 및 인력 감축(안)을 제출하지 않아 기획재정부는 10월말 11월초에 걸쳐 강압적인 실행방침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.

○ '경영효율화' 세부 방안(효율성 10% 이상 향상 목표)

- 조직 및 인력은 기관 고유의 핵심기능 수행에 필요한 수준으로 감축·운영
 - . 과도한 상위직(임원포함) 및 지원인력 축소, 불요불급한 파견·교육 등 비 현업인력 축소, 조직 유연성 제고를 위한 대부서 체제 운영 등
- 지방조직(지역본부-지사-영업소)은 계층구조의 단순화·광역화 등을 통해 대폭 정비
 - . 해외 조직도 사업성과 및 서비스 수요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축소
- 임금피크제 도입 등 인력 운영의 유연성 제고
- 임원 등 단위 부서장과의 경영계약제, 내부성과관리 강화
- 민간 수행이 가능한 기능은 민간위탁(outsourcing) 추진
- 정부예산 절감 10% 취지에 맞춰 예산절감

- 출자(재출자) 회사 정비 및 관리체계 개선, 유희자산 매각 등
- 감사원·국회 지적사항 개선 등 조직·인사예산집행에서 경영관리 강화

○ '경영효율화 방안' 점검

- 기획재정부 협의 보완 대상 기관 :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, '기타공공기관' 중 지정(공기업 자회사, 50인 이상 중)
- 주무부처 자율 자체 계획 수립 : '기타공공기관' 중 정부출연연구기관(50개), 대학병원· 대학(17개), 문화예술단체(6개), 50인 이하 소규모 기관(29개 등)

○ 예상되는 경영효율화 공세

- 앞서 발표한 정부의 경영효율화 방안이 주로 10% 예산 감축을 전제로 한 조직 운영의 효율화 측면이지만, 이미 계속되는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, 기관장 경영계약의 내용, 금융 부문을 필두로 한 임금 감축 움직임, 2008년 경영평가 지표 수정, 지난 시기 경기 위축 국면('93년, '98년)에서 나타난 재정 긴축 등을 보면, 경영효율화 공세의 핵심은 고용 조건의 변화, 인건비 동결 및 축소, 임금체계의 개악 등으로 연결될 것으로 예상.

○ 조직 운영 측면

- 일단 정부 발표에서 구체화된 것은 비핵심업무의 외주위탁 확대, 자회사 운영에 대한 집중 감시감독, 공기업 사업의 특성에 따른 '독립사업부제' 확대임.

(2) 성장률 하락 및 재정 압박으로 인한 2009년 정부예산 조정 및 운영예산 긴축

① 2009년 정부예산 편성 근거

○ 4.8~5.2%의 성장률을 근거로 한 '09년 정부예산(안)

- 정부(기획재정부)가 국회에 제출한 '09년도 정부예산(안)은 올해보다 6.5% 증가한 273.8조원으로 구성되고 구체적으로는 예산 지출 209.2조원, 기금 지출 78.8조원임.

<2009년 정부예산(안)>

(단위 : 조원)

| 수입/지출 | 구성 내역 | '08년도 | '09년도 | 증감율(%) |
|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|
| 수입부문 | ○ 예산 | 195.1 | 209.2 | 7.2 |
| | - 국세 | (165.6) | (179.6) | (8.4) |
| | - 세외수입 | (21.3) | (21.5) | (0.6) |
| | - 보전수입(국채 등) | (8.2) | (8.1) | (△1.2) |
| | ○ 기금 | 87.3 | 94.0 | 7.7 |
| | ○ 총수입 | 274.2 | 295.0 | 7.6 |
| 지출부문 | ○ 예산 | 195(199.7) | 209.2 | 7.2(4.8) |
| | ○ 기금 | 74.5(74.8) | 78.8 | 5.8(5.3) |
| | ○ 총지출 | 257.2(262.1) | 273.8 | 6.5(4.5) |

* '08년도 지출부문의 ()는 추가경정예산임

○ '09년도 예산(안)의 주된 쟁점

- 문제는, 이러한 '09년도 정부예산(안)이 4.8~5.2%의 성장률을 근거로 한 수입예산(안)에 기초하여 제시되었고, 여기에는 이미 국채 발행 등을 통한 적자예산이 7.3조원이 포함된 것임.
- 수입예산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국세의 경우 성장률에 직접 관련된 것인데, '09년도의 경우 8.4%의 증가율을 설정하고 있음. '09년도부터 2MB정부의 감세정책의 효과가 1차 나타난다는 측면에서 의아스런 수치임.

② '09년 예산(안) 조정 움직임

○ '09년도 성장률의 진단

- 앞서 '09년도의 성장률에 대해 정부는 08년 하반기부터 고유가 진정 및 무역수지 적자 축소, 세계경제의 경기 회복 등을 근거로 4.8~5.2%로 설정하였으나, 9월부터 나타나는 글로벌 금융위기 및 한국경제의 위험 진단(무역수지 적자 및 내수 위축, 주가 폭락 및 환율 폭등 등)을 근거로 이미 민간연구소 뿐 아니라 국책기관(KDI, 한국은행)에서조차 '09년도의 성장률은 3.3% 수준에 머물 것으로 '내부적으로'(외부 발표 3.8% 수준) 진단하고 있음.
- 문제는, 현재의 금융위기가 실물경기 위축으로 급속히 전이되는 과정 속에 내년도 성장률은 현재의 예상보다 더 나빠질 우려까지 나타나고 있다는데 있음.

③ 공공부문 운영예산 감축 전망

○ 2MB정부의 경기 불황시 재정운영 방향

- 이러한 경제 위기 징후와 관련하여 2MB정부는 여전히 성장 논리에 갇혀 건설경기 및 기업 투자 관련 규제완화, 법인세 인하 등을 앞세운 경기부양, 금융부문 규제완화, 주요 정부자산의 매각을 통한 외화 확충, 부자들을 위한 감세방안을 선택함으로써 현재의 한국경제구조가 지닌 취약성(무역 의존 심화 및 내수기반 취약)을 외면하고 있음.
- 따라서, 이러한 2MB정부의 기조가 변경되지 않는 한 2009년도 예산 지출은 경기부양을 위한 투자 측면의 예산 확대(세외수입 확대, 국채 발행, 추경 편성 등) 및 이를 위한 공공부문 운영예산의 긴축, 복지 관련 정부 지출 축소 흐름은 불가피할 전망이다.

○ 공공부문 운영예산 감축

- 현재 정부 일각에서는 성장률 하락 및 감세 정책으로 인한 세수 부족과 관련한 정부 재정 지출의 '비상대책'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, 일단 '09년도 정부(행정기관) 및 공공기관의 운영재원의 최소한 동결은 확실시될 전망이다.
- 다만, 추가 긴축방안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최종 입장은 정리되지 않았지만, 현재의 움직임으로는 인건비의 감축(5% 이상) 방안 및 추가 절감방안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. 1)

1) 이와 관련하여 '93년 및 '98년의 사례가 비교될 수 있음. '93년에는 인건비 3% 인상분을 설정하고 7월1일부터 집행하도록 한 바 있고, '98년에는 구조조정과 관계없이 인건비 10%를 강제로 절감 집행한 바 있음.

- 공공부문의 운영재원 감축은 개별 공공기관의 인건비 및 운영경비 긴축, 조직의 슬림화, 성과관리체계 확대, 공기업 및 노조에 대한 도덕성 공격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음.

(3) 공공부문 경영평가, 예산지침, 기관장 경영계약

o 공공부문 경영통제 강화

- 경영효율화를 통한 예산, 인력, 조직운영의 활성화를 강도높게 요구할 정부는 그 구체적인 강제 수단으로 경영평가를 통한 성과급, 예산지침을 통한 예산 지출 조정, 기관장 경영계약을 통한 경영효율화 상시 점검을 복합적으로 채택할 전망.

① 경영평가 지표 개악

o '08년 경영평가 편람 수정

- 10.1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“'08년도 공기업·준정부기관의 경영평가편람“(07년 11월 확정)을 수정함. 수정 과정에서 노조의 의견 수렴은 한국노총까지도 생략함.
- '08년도 경영평가 지표는 인건비 관련 내용 및 성과 차등 내용이 대폭 확대된 독소조항으로 인해 '07년 11월 의결 당시 논란이 많았던 것이었음.
- 정부가 발표한 주요 수정 내용은 △ 중소형 준정부기관의 평가 간소화(정원 100인 또는 자산 500억원 미만인 26개 준정부기관에 대해 비계량평가 생략)²⁾ △ 기관장 평가방법 간소화(경영목표평가는 기관 경영평가 결과 활용) △ 공공요금 안정, SOC 투자확대와 관련한 경영부담 요소의 평가시 고려 등과 함께,
- △ 정부권장정책의 이행실적 지표의 변경(비정규직 대책, 공공기관 지방이전 내용 삭제) △ 감사원 지적사항 반영(경영평가성과급 등) △ 예산집행률 산출시 '공공기관 예산 절감 및 활용계획'(08년 4월)에 따른 예산절감액의 예산현액 차감 등의 개악조치가 포함.

o 경영평가 편람 개악의 의미

- 감사원이 6월 지적한 '경영평가성과급 개선조치'에 따르면, 경영평가성과급의 퇴직금 항목 제외³⁾ 및 내부 차등 전제 지급 등이었는데, 이를 평가지표에 반영할 경우 상당 기관의 퇴직금 및 성과급 관련 개악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.
- 예산집행률 산출시 절감액의 차감 조치는 상당수 공공기관에서 '08년 예산 절감(경비 5%)을 실행치 않은 기관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취해질 것을 의미.
- 정부 권장정책의 이행실적(비정규, 지방이전 등)의 평가지표 삭제는 노무현정권 하에서 이뤄진 '형식적 개선'내용마저 후퇴시키는 것임.

o '09년도 경영평가 지표 준비

2) 이러한 중소형 준정부기관의 경영평가 간소화는 실제 평가과정에서 큰 실효성이 없는(임금 및 성과급의 변칙 집행을 위한 재정 여력 자체의 한계)데도, 해당 기관에서는 경영평가의 강도가 완화된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'착시(錯視)효과'를 줄 수 있음.

3) 감사원은 공기업의 전환금 중 정기상여금을 제외한 불용예산(예, 특별성과급 등)을 전용하여 전환금으로 설정한 부분에 대해 퇴직금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림(2008년 8월23일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의 질의에 대한 회신).

- 기획재정부는 '09년 경영평가 지표를 11월말까지 확정하도록 되어 있는데, 이미 '08년 경영평가지표 의결 당시 독소조항과 함께 이번 10월의 개악 조치가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됨.
- '09년 예산지침에 반영할 인건비 관련 '심각한' 조치 등은 현존 평가지표로도 측정이 가능.

○ 경영평가 자체의 실효성 강화

- 지난 6월말에 발표된 '07년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부진기관으로 선정된 15개 기관에 대해서는 이미 8월부터 경영컨설팅이 이뤄지고 있고, 이후 기관장 계약 당시 '특별조치'('09년 평가에서 시정되지 않을 경우 해임)를 약속한 바 있어, 이후 경영평가의 실효성에 대한 압박조치가 피부로 와닿을 것으로 예상.

② '09년 예산지침 발표 임박

○ 11월 중하순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

- 11월 20일경 안팎으로 예상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'09년 경영평가 지표와 함께 '09년 예산지침 (공기업 및 준정부기관)을 의결할 것으로 예상.
- 또한, 이 시기에는 각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 조치의 실행계획 전반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의결이 예상되어 '비상한 대응'이 요구됨.

○ '08년 예산지침 검토

- '07년 11월에 의결된 "08년 공기업·준정부기관 예산지침"에는 △ 결원 인건비의 전용 금지 △ 예산지침 위반시 '09년 인건비 기준 편성시 위반 내용 삭감 △ 경영평가 우수기관 및 부진기관의 경비 차등 △ 특별휴가의 삭감 및 연차휴가 강제 등의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있는데, 이러한 내용이 공공기관에서 준수되지 않을 경우 감사원의 감사결과 등을 기초로 한 경영평가지 반영, '09년 예산 반영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.

○ '09년 예산 및 주요 내용

- '09년 예산지침에는 인건비 수준에 대한 '비상조치'가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, 인건비 동결 및 호봉제 폐지가 핵심적 내용으로 설정될 것으로 예상되고, 4) 경영평가성과급 관련 감사원 권고조치가 경영평가 편람 수정에 이어 반영될 것으로 예상.
- 아직 구체화되지 않지만, 경영평가성과급의 제도 개편(퇴직금 항목 제외)과 함께 기관 성과급 차등폭 (현재 공기업 200~500%, 준정부기관 100~200%) 확대 및 하한선 조정(부진기관의 '전환금' 잠식)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. 5)

③ 구조조정을 위한 '황건계약', 기관장 경영계약

4) 정부는 임금 동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겠지만 호봉제 폐지 및 연봉제 도입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해 이는 명시하지 않을 수 있음. 그러나, '06년부터 이미 인건비 인상분에 호봉승급분이 포함되어 편성되어왔기에, 임금 동결은 결국 호봉승급분 삭감 내지 호봉제 폐지로 나타나고 이는 자연스럽게 연봉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됨.

5) 경영평가 성과급의 차등 폭 확대는 자연스럽게 기존의 임금(소위 '전환금')마저 삭감당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데다, 퇴직금 적용 항목 제외라는 의도를 손쉽게 관철할 수 있는 방안. 현재 공기업은 신규 경영평가 진입시 250%의 전환금을, 준정부기관은 100%를 각각 종전의 임금에서 성과급으로 전환하여 이를 인건비가 아닌 '예비비'로 편성하고 있음.

o 기관장 경영계약의 내용

- 공공기관(305개)의 기관장에 대해서는 6월부터 신규 임명되는 기관장에 대해 1년 단위 경영계획서 제출 및 경영계약 체결을 제도화시켰고, 경영계약 체결시 기관장평가가 근거로 작용.
- 기관장 평가는 '경영계획서 이행실적평가'(50%, '08.8.26 지침 시행)과 '경영목표평가'(50%, 기관 경영 실적평가 반영)로 구성되는데, 기관장 경영계획서 이행실적에는 공공기관 선진화 및 경영효율화 실적, 노사관계, 성과관리체계 등이 핵심적으로 포함.
- 특히, '노사관계'부분에서 공공기관의 '노사평화선언'(또는 '선진화를 위한 노사공동선언')은 이미 지방공기업 사장 평가에서 절대적 점수를 얻게 하고 있듯, 중앙 공공부문 기관장 평가에서도 핵심적 목표로 자리잡을 것임.

(4) 공공부문에 대한 도덕성 시비 및 이데올로기 공세

① 감사원 등을 동원한 공공부문 도덕성 공세

o 공기업 감사결과의 지속적 발표

- 감사원은 공기업에 대한 기획감사(3.24~4.18) 결과를 토대로 이후 중간 발표(3.31 1차 중간 발표, 5.20 2차 중간발표 등) 또는 공기업 선진화의 대상 공기업에 대한 수시 결과 발표 등을 통해 공기업의 도덕성 시비를 계속함. 경영평가성과급(퇴직금 포함) 및 인건비(시간외수당, 교통비 등) 운영 등에 대해서도 수시로 입장을 발표함.
- 감사원은 공기업 감사 이후 준정부기관(4.24~6.4)과 지방공기업(9.16~10.8)에 대해서도 유사한 감사를 지속하면서, 각 공공기관 '경영효율화'의 근거로 설정하고 있음.

② 뉴라이트 등 '친위세력' 동원

o 공기업개혁시민연합(공개련) 활동

- 10.23. '바른사회시민연대' 등 뉴라이트 계열 21개 '시민사회단체'(?)는 '공기업개혁시민연합'(공개련)을 발족하고 공기업 비리 감시를 조직적으로 전개할 것을 밝힘.
- 공개련은 이미 감사원이 밝힌 공기업 감사 결과를 토대로 "국민을 놀라게 한 공기업 부조리 백서"를 10.23. 공개함.

(5) 공공부문노조에 대한 공격 및 노사관계제도 개악

① 9.11 공공기관 CEO 연찬회

o 노동부 장관 등의 공세적 연찬회

- 9.11 노동부장관과 관련 부처(기획재정부, 행정안전부) 차관이 참석한 100여개 공공기관 경영진, 20여개 지방공기업 경영진이 참여한 연찬회에서는 2MB정부의 공공부문 노사관계에 대한 이후 운영방향을 예측케 하는 움직임이 확인.
- 이 자리에서 노동부장관은 공공기관 노조의 70%가 소위 '강성노조'라고 지목하면서, 공공기관에 남

아있는 불합리한 노사관계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피력.

○ 정부가 언급한 불합리한 관행

- 정부는 △ 노조의 과도한 경영참여(이사 추천, 인사위 참여, 경영진 인사시 개입 등) △ ‘사실상의 전임자’가 인정되는 불합리한 노조전임제도 △ 예산지침을 무시하는 임금교섭 및 편법 예산 집행 △ 불법 파업 목인 및 관련 해고자의 복직 등을 소위 ‘불합리한 관행’으로 언급함.

○ 공공기관의 노사관계 선진화 주문

- 이날 연찬회에서는 공공기관에 대해 직접 ‘노사평화선언’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, 이와 비슷한 표현 (“선진화되고 성숙된 노사관계의 구체적 노력”)을 주문함.

② 공공부문노조에 대한 공세

○ 전교조 서울지부 단협 해지

- 서울시교육청은 전교조에 대해 ‘04년 체결한 단체협약을 10.20. 해지 통보(노조가 동의치 않을 경우 6개월후 효력 발생)
- 주요 내용은 △ 학업성취도 평가 표집학교 실시 △ 특기분야 교원 전임요청 제한 △ 근무상황카드 폐지 △ 학교인사자문위원회 구성 △ 노조사무실 편의 제공 등으로서 주로 노조의 경영참여 및 노조 지원 활동 부문임.

○ 공무원노조 ‘전임자’ 중징계

- 행정안전부는 10.21. 각 행정기관기관에 공문(“공무원단체 불법관행 해소 추진 관련 협조 요청”)을 보내, △ ‘사실상 노조 전임’하는 자에 대해 11.14까지 전원 중징계조치 △ ‘불법 전임활동 기간’내 지급된 보수 환원 △ 노조 가입금지 대상자에 대해 10.31까지 전원 경징계 조치 등을 주문
- 이는 ‘근무시간 중 조합활동’을 공가 또는 출장으로 처리해주는 단체협약이 ‘국가공무원복무규정’ 및 ‘지방공무원복무규정’이 위반된 협약이라는 근거

○ 서울시 공기업의 단협 개약 주문

- 이미 ‘07년말부터 산하 공기업의 경영효율화를 강도높게 추진해 온 서울시는 최근 감사원 감사가 진행중인 기간(9.17~10.8)에 ‘서울시 5개 공기업 경영혁신계획’(9.23)을 통해 △ 인력감축(‘10년까지 총 정원 19,687명중 17.3%인 3,406명 감축)을 통한 경영효율화 △ 불합리한 단체협약 개선과 선진 노사 문화 구축 △ 고객서비스의 획기적 향상 등을 추진하겠다고 함.
- 서울시가 밝힌 불합리한 단체협약 개선은 주로 노조의 경영참여, 노조간부 인사 특례, 전임자 운영, 근무형태 등에 대한 것으로 나타남.

③ 노사관계제도 개악

○ 제2의 노사관계 선진화 추진

- ‘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’(노사정위)는 10.29 본회의를 개최하여 ‘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’를 발족하

- 고 복수노조 및 교섭창구 단일화 건, 전임자 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개시할 것으로 알려짐. 이와 관련하여, 2MB는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유예가 없다는 것을 누차 천명.
- 문제는,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전임자 운영 등에 대해 이미 '10년의 법적 효력과 무관하게 '09년부터 경영효율화 차원에서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9.11 연찬회 이후 계속 제기되고 있음.

2. 11월 05일 전지부 동시다발 중식집회 개최 건

1) 대회명칭 : 08 임·단투 승리!를 위한 발전노조 조합원 결의대회

2) 일 시 : 11월 05일(수) 12:00 ~ 12:50

3) 내 용

- 제30차 중앙위원회 결의사항 공유(쟁대위 전환 등)
- 임·단협 교섭성황 공유

4) 방 법

- 출근선전지(중앙유인물 지부별 인쇄) 배포하며 중식집회 참여 독려
- 조합원 참여 독려 시 구내식당 피켓팅 등 지부별 자체 계획 수립하여 최대한 조직
- 중앙 및 본부 조합간부 담당 지부별 결합(사전 연락 필 - 11월05일 제외)
- 전 조합원 중식집회 시 투쟁복 착용(행사 후 지부에서 수거 보관)
- 지부별 대회 진행 통일(식순 참조)

5) 식 순

- 노동의례(열사들에 대한 묵념,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)
- 개회선언(부지부장)
- 투쟁사(지부장) - 지부별 작성
 - 투쟁사 후 사회자 재량껏 집회 분위기 고조 방안 마련
- 투쟁 경과보고(총무부장 또는 사무장) - 30차 중앙위원회 결과 및 임·단협 교섭성황, 기타
- 격려사 또는 투쟁사(결합 가능한 연대 단체 및 해당 본부장 참여시)
- 조합원 투쟁결의 - 조합원 또는 대의원 중 1인 선정 투쟁의 결의를 밝힌다.
- 폐회 선언(파업가 제창)

※ 주의사항 및 지침

- 조합원 사전 공지 및 지부별 준비 철저
- 집회 후 중앙 보고 (지부별 참석인원 및 사진 송부) 철저- 홈페이지 등재
- 집회 준비물 : 지부별 피켓 제작, 조합원 투쟁복, 디지털사진기, 캠코더 등
-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투쟁명령 지침 이행 결과 지속적으로 전 조합원 공개 예정이므로 모든 행사사진 및 결과 송부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.

3. 11월 09일 전국노동자대회 참석 건

■ 사전행사(연맹별 결의대회)

1) 대 회 명

- 공공운수통합산별노조 건설! 공동투쟁 승리! 사회공공성 쟁취!
공공운수노동자 결의대회

2) 일시 : 11월 09일(일) 13:00 ~

3) 장소 : 전국노동자대회 장소(추후공지)

4) 주요요구

- 통합산별의 힘으로 사회공공성 강화하자!
- 통합산별의 힘으로 사유화를 저지하자!
- 통합산별의 힘으로 비정규직 철폐하자!
- 공동투쟁의 힘으로 구조조정 분쇄하자!
- 공동투쟁의 힘으로 노동기본권 쟁취하자!
- 공동투쟁의 힘으로 생존권을 사수하자!

■ 본 행사

“단결된 노동자의 힘으로! 모아진 연대의 힘으로! 민생파탄 주범! 독재와 신자유주의를 갈아엎자!”

1) 대회명

-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2008년 전국노동자대회

2) 일 시 : 11월 09일(일) 14:00 ~

3) 슬로건

-
- 노동탄압, 민주말살 이명박독재 심판하자!
- 경제대란, 민생파탄 강부자정권 심판하자!
- 비정규직확산, 노동기본권 파괴, 반노동자정권 심판하자!
- 몰락하는 신자유주의! 새사회 건설로 진군하자!!



4) 주요요구

- 반노동 반민생 이명박 정권 심판
- 경제파탄 물고오는 미국식 신자유주의 분쇄
- 복수노조 쟁취, 노조전임자임금 자율교섭 쟁취
- 건강보험보장성 확대, 의료공공성 강화
- 종부세 무력화 저지, 1% 부자정책 폐기
- 비정규악법 개악저지, 전면재개정 쟁취
- 방송 낙하산 인사 철회, 공정방송 쟁취
- 공안탄압 분쇄, 국가보안법 철폐

5) 참석지침 및 세부사항

- 통산근무 조합원 전원 참석한다.
- 장소는 추후 유선으로 통보예정. 끝.